

ASAN POL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여론연구센터
아산 데일리 폴 조사결과 요약

| 한일관계 평가·세제 개편안 평가 |

2013년 8월 1~15일

김지윤 연구위원

강충구 연구원

이의철 연구원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발표일 직전 3일,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예) 5월 4일 수치: 5월 1~3일 조사결과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이란?

주요 정치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일 발표하기 위해 실사(data gathering)를 3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실사와 자료발표의 순환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정치사회 지표는 직전 3일간 조사된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강충구 연구원 (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 이의철 연구원 (02) 3701-7337, eclee@asaninst.org

▶ **일본에 대한 호감도** | 0점: 비호감, 5점: 보통, 10점: 호감 |

1월 3.31점 ▶ 3월 3.19점 ▶ 5월 2.93점 ▶ 7월 2.96점 ▶ 8월 2.64점

▶ **한일 관계** : 경쟁관계 71.3%, 협력관계 20.9%

▶ **세제 개편안 인지도** : 알고 있다 81.0%, 모른다 17.6%

▶ **세제 개편안 찬반** : 반대 41.4%, 찬성 32.6%, 모름/무응답 26.0%

▶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인식** : 증세이다 63.1%, 증세 아니다 17.8%, 모름/무응답 19.1%

▶ **세부담 증가 대상** : 서민 37.4% > 중산층 37.2% > 부유층 9.5%

▶ **복지재원 마련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

의향 있음 44.4%, 의향 없음 51.6%, 모름/무응답 4.1%

· **성별** : 남성 의향 있음 52.7% > 여성 의향 있음 36.2% | 남성 의향 없음 44.1% < 여성 의향 없음 58.9%

· **지지정당별** : 새누리당 의향 있음 49.5% > 민주당 의향 있음 39.9% | 새누리당 의향 없음 46.5% < 민주당 의향 없음 57.3%

▶ **복지재원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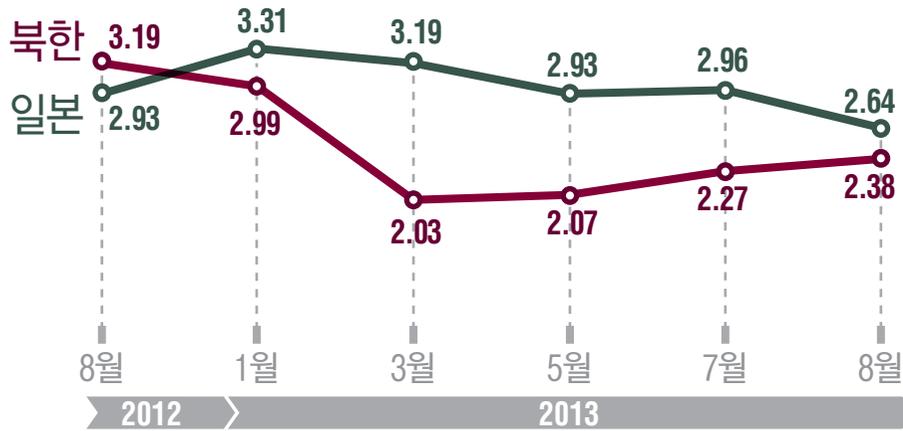
고소득자 증세 55.1%, 지하경제 양성화 15.5%, 법인세 인상 9.6%, 근로소득세 인상 6.0%, 부가가치세 인상 2.1%

- 8월 1일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반발로 장외투쟁 돌입
- 8월 4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 대통령 단독회담 제안
- 8월 5일 청와대,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선임 및 수석 인사 단행
오바마 대통령,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해 미국내 수입금지를 결정한 ITC(미국무역위원회)의 판정에 거부권 행사
- 8월 6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여야 대통령 3자 회담 제안
- 8월 7일 통일부, 개성공단 경험 보험금 지급 발표
정부, 북한의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제의 수락
- 8월 8일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중산층 증세 논란 점화
민주당, 청와대의 5자 회담 제의 거절
-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
최장집 교수, '안철수 싱크탱크' 이사장직 사임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이달 23일로 연장 의결
- 8월 13일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안 발표, 소득세 부담 기준선 연봉 5,500만원으로 상승
- 8월 14일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7차 실무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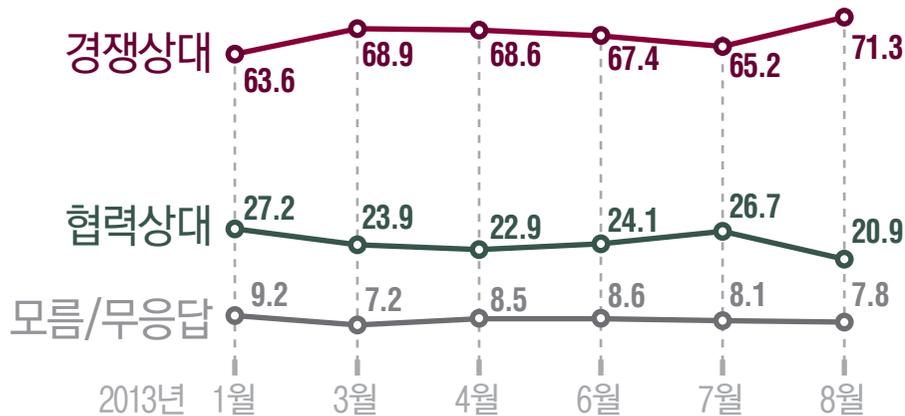
조사기간 8월 3~5일, 단위 (평균점수, 11점 척도)

‘전혀 호감이 없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호감이 있다’를 10으로 했을 때, 일본/북한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갖고 계십니까?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말씀해주세요



조사기간 8월 3~5일, 단위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지난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한일관계가 다시금 경색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계에서는 주변국을 자극하는 우경화된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월례 연구회에서 한 “일본이 독일의 나치 정권으로부터 아무도 모르게 헌법을 개정할 것을 배우는 것이 어떨까”란 나치식 개헌 발언을 필두로, 7월 30일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의 “한국의 민도(국민수준을 표현하는 일본어)가 문제가 된다”는 발언, 일본 국민의 61%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알고 있다는 일본 내각부의 대국민 독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 우리 나라를 자극하는 여러 사건이 이어졌다. 지난 광복절에는 작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190명의 일본 의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다. 아베 총리 역시 대리인을 통해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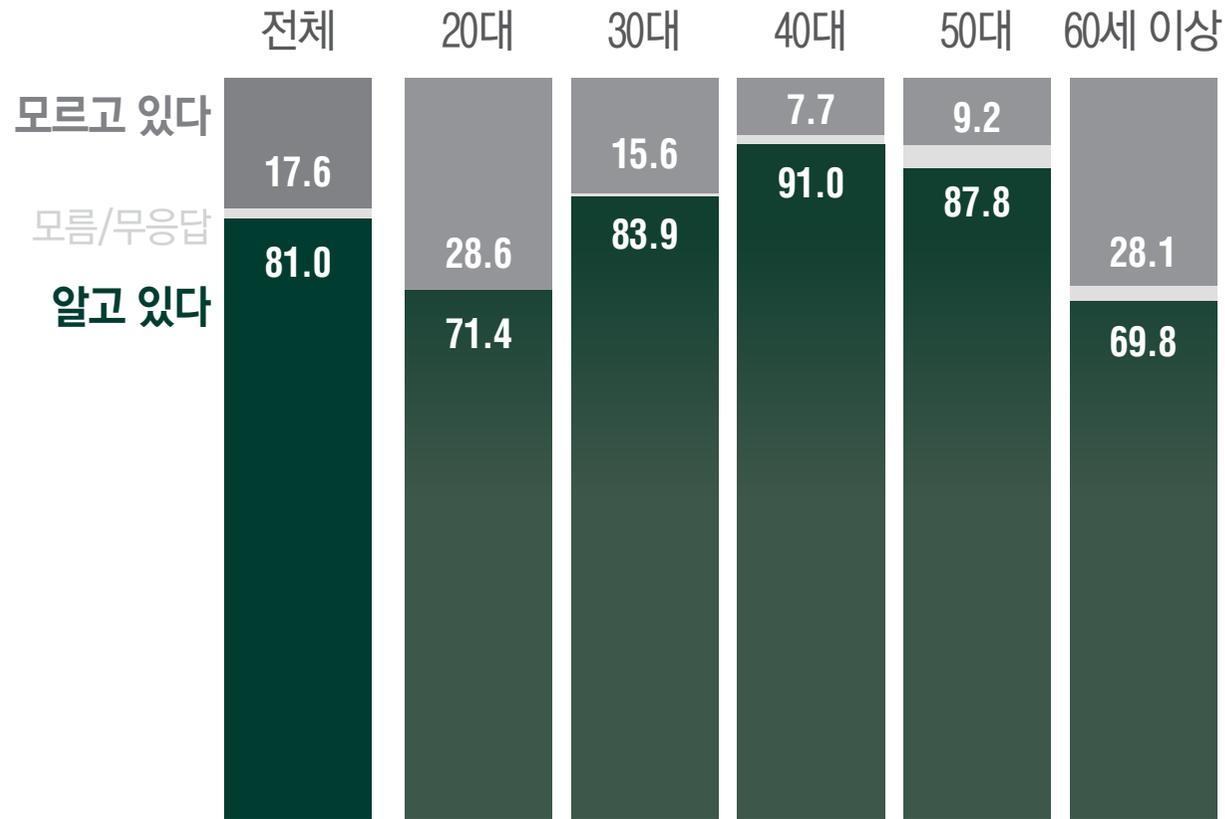
일본에 대한 여론의 호감도는 이러한 사건들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8월 조사에서 2.64점으로 나타나며 전혀 호감이 없다는 0점에 더욱 가까워졌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올 1월부터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으며, 8월에는 한일관계가 매우 경색됐던 1년 전보다도 더욱 낮게 나타났다. 당분간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점대로 낮게 유지되던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최근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며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한일관계를 물어보는 조사 결과에서도 양국관계가 경색된 것으로 보는 여론을 확인 할 수 있다. 올 3월부터 7월까지 한일관계를 경쟁 관계로 보는 비율은 60% 중후반대를 유지해 왔으나, 이번 8월 조사에서는 70%가 넘는 응답자가 한일관계를 경쟁관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양국을 협력상대로 본 비율도 7월의 26.7%에서 5.8% 하락한 20.9%에 불과했다.



조사기간 8월 12~14일, 단위 (%)

선생님께서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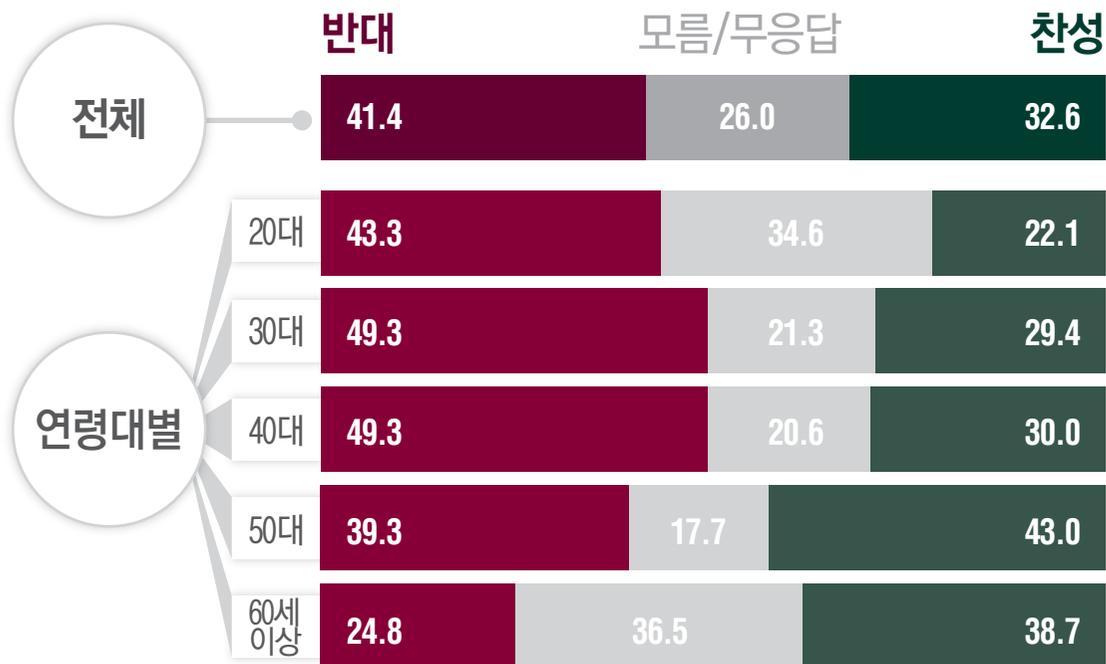
정부는 8월 8일 “2013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한다는 점이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개편안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81.0%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개편안이 중산층 증세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세제 개편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인지도에 있어 세대별 격차가 뚜렷하게 보이는 점은 유의할 만 하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50대까지의 응답자 중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평균 87%로 굉장히 높았다. 반면 학생 비율이 높은 20대와 은퇴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 비율이 낮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71.4%와 69.8%에 머무르며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세제 개편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30, 40대와 50대가 이번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기간 8월 12~14일, 단위 (%)

선생님께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세제 개편안 찬반 조사에서는 개편안을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41.4%의 국민이 반대, 32.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20대, 30대, 4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5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서도 역시 20대와 60세 이상의 30%가 넘는 응답자가 모름/무응답으로 개편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며 이 이슈에 대해 다른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무관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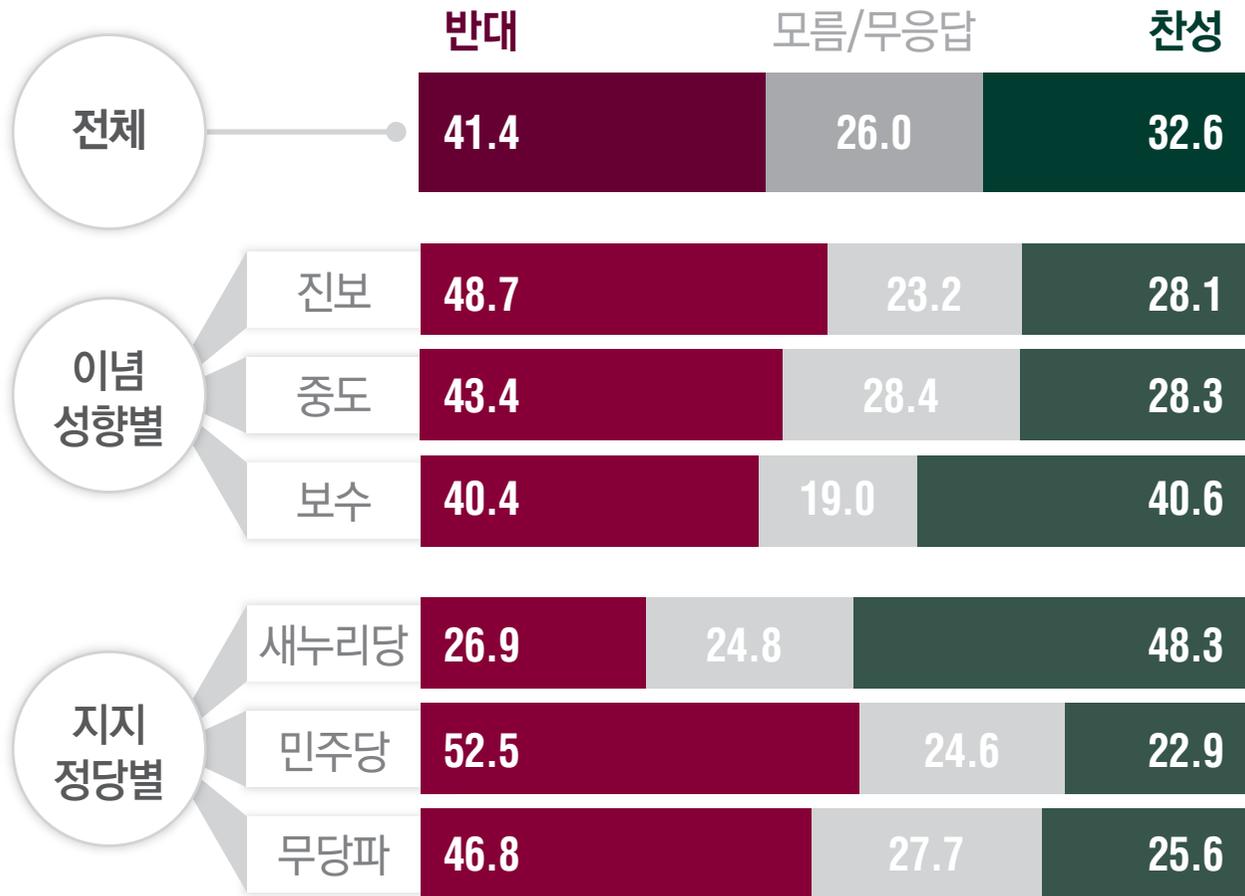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30~40대와 50대 사이에서도 세제 개편안 찬반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갑이 얇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30~40대가 50대에 비해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제 개편안 반대 비율: 30대 49.3%, 40대 49.3%, 50대 39.3%).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의 56.3%, 블루 칼라의 47.2%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세제 개편안을 더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직업군이 증세 논란의 중심이었던 봉급생활자를 대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수의 언론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여론의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실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사기간 8월 12~14일, 단위 (%)

선생님께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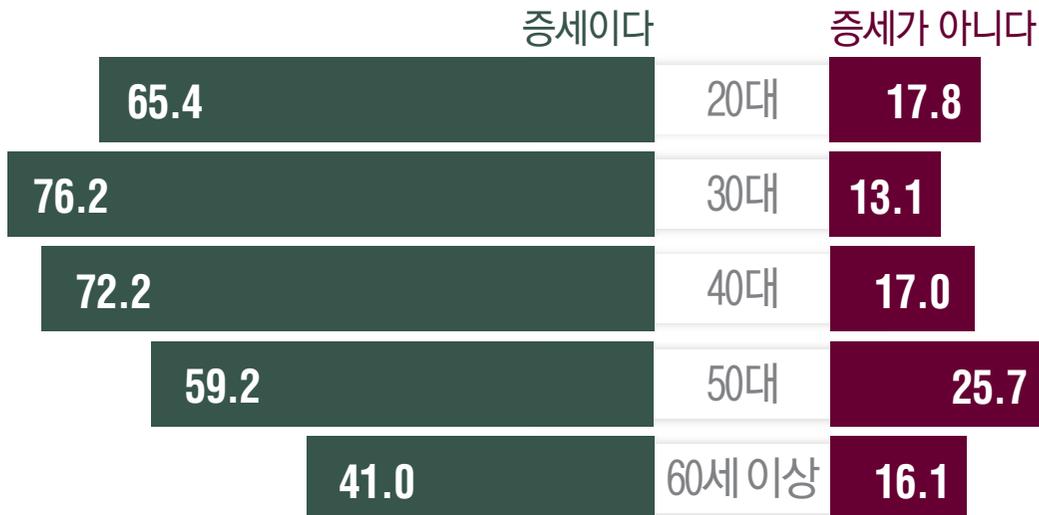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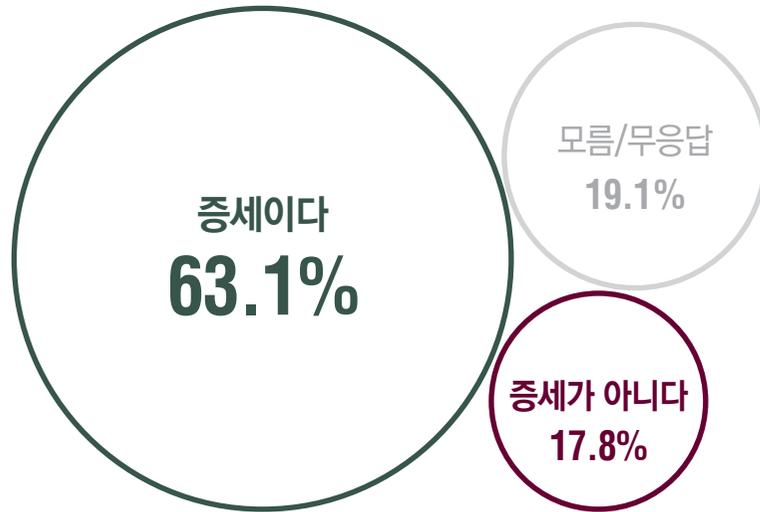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층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면, 보수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눈이 띈다. 진보층은 개편안에 대한 찬성이 28.1%, 반대가 48.7%로 거의 과반에 이르는 응답자가 개편안을 반대했고, 보수층에서는 찬성(40.6%)과 반대(40.4%)가 불과 0.2%포인트 차이만을 보였다. 진보와 중도층 모두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30% 미만이었던 점에 비해 보수층에서 40%에 이르는 응답자가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며 보수층과 타집단간 세제 개편안 찬성에 대한 의견차가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도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높은 찬성(48.3%)을 보였다. 반대하는 비율은 26.9%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52.5%가 개편안에 대해 반대했다(찬성 22.9%). 무당파는 46.8%가 반대, 25.6%가 찬성이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적은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개편안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응답자의 정파성에 따라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경우,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보다는 선호 정당에 따라 찬반이 나뉜 것이다.



조사기간 8월 12~14일, 단위 (%)

선생님께서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다음 주장 중 어느 것에 더 동의하십니까?



“2013 세제 개편안”이 증세인지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줄였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과 정치인은 실제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데 정부가 얇은 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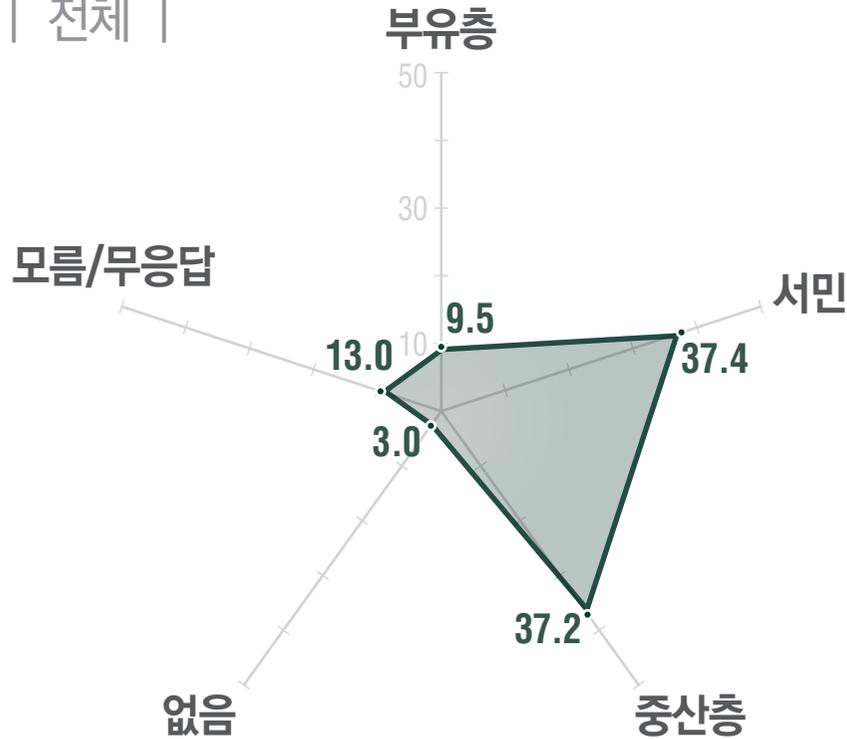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63.1%의 국민이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증세라고 답했다.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답한 국민은 17.8%뿐이었다. 이번 개편안을 실질적 증세로 보는 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특히 높았다. 30대의 76.2%, 40대의 72.2%가 세제 개편안을 증세로 봤다. 나머지 세대에서 개편안이 증세라고 본 비율은 20대 65.4%, 50대 59.2%, 60세 이상 41.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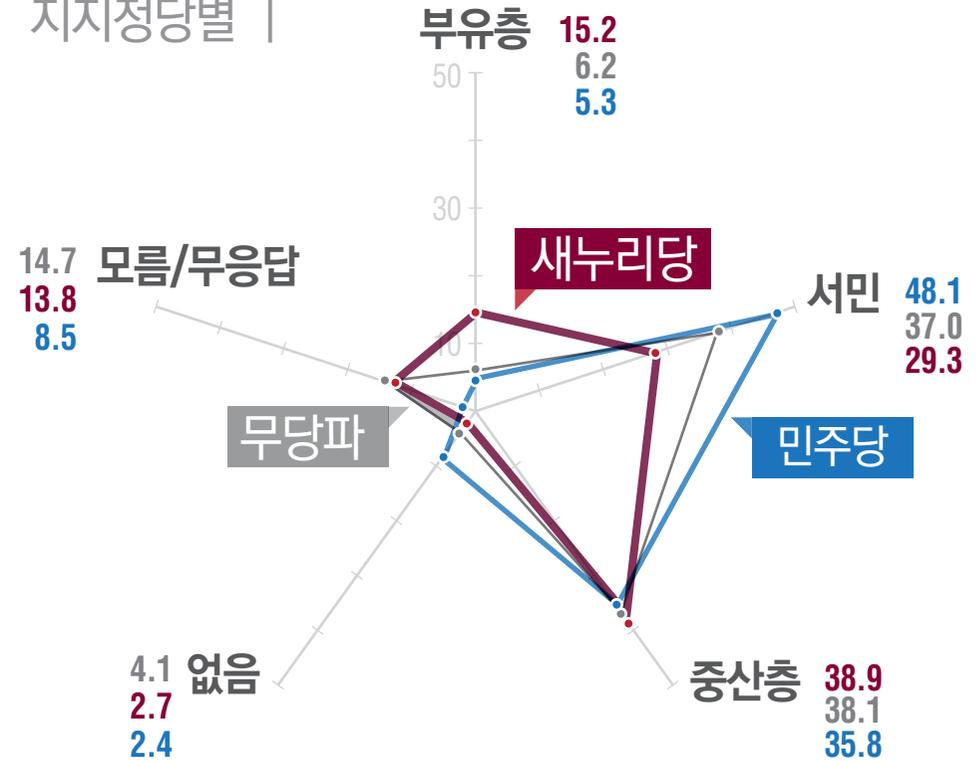
조사기간 8월 12~14일, 단위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가장 부담이 될 대상은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



| 지지정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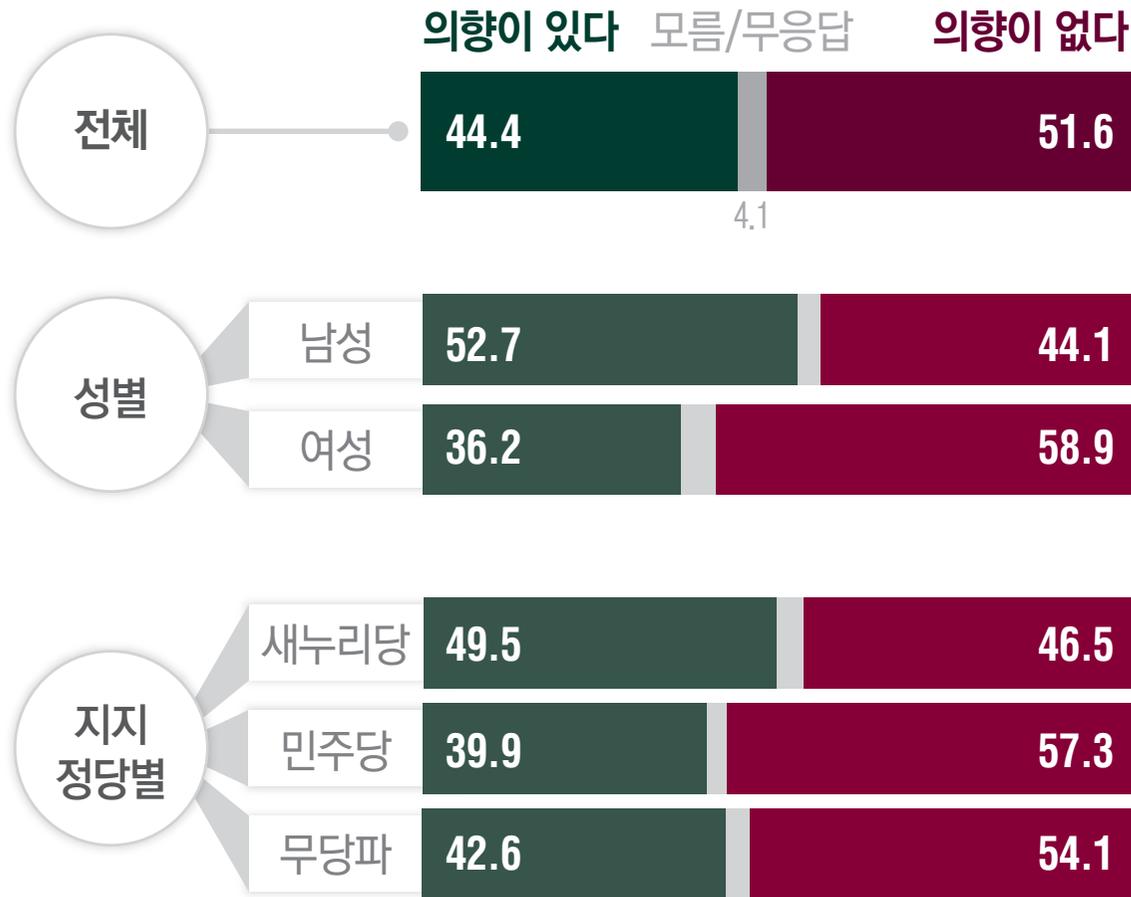
🕒 우리 국민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세제 개편안으로 가장 부담이 될 대상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37.4%가 서민, 37.2%가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부유층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본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세제 개편안 논란이 미디어를 통해 중산층 증세로 널리 알려지며 일종의 프레임링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정당별로 구분하여 본 결과, 중산층과 서민에서 부담이 늘었다는 비율은 새누리당-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유층의 세 부담이 커졌다고 본 비율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15.2%로 민주당 지지층(5.3%)과 무당파(6.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조사기간 8월 12~14일, 단위 (%)

선생님께서서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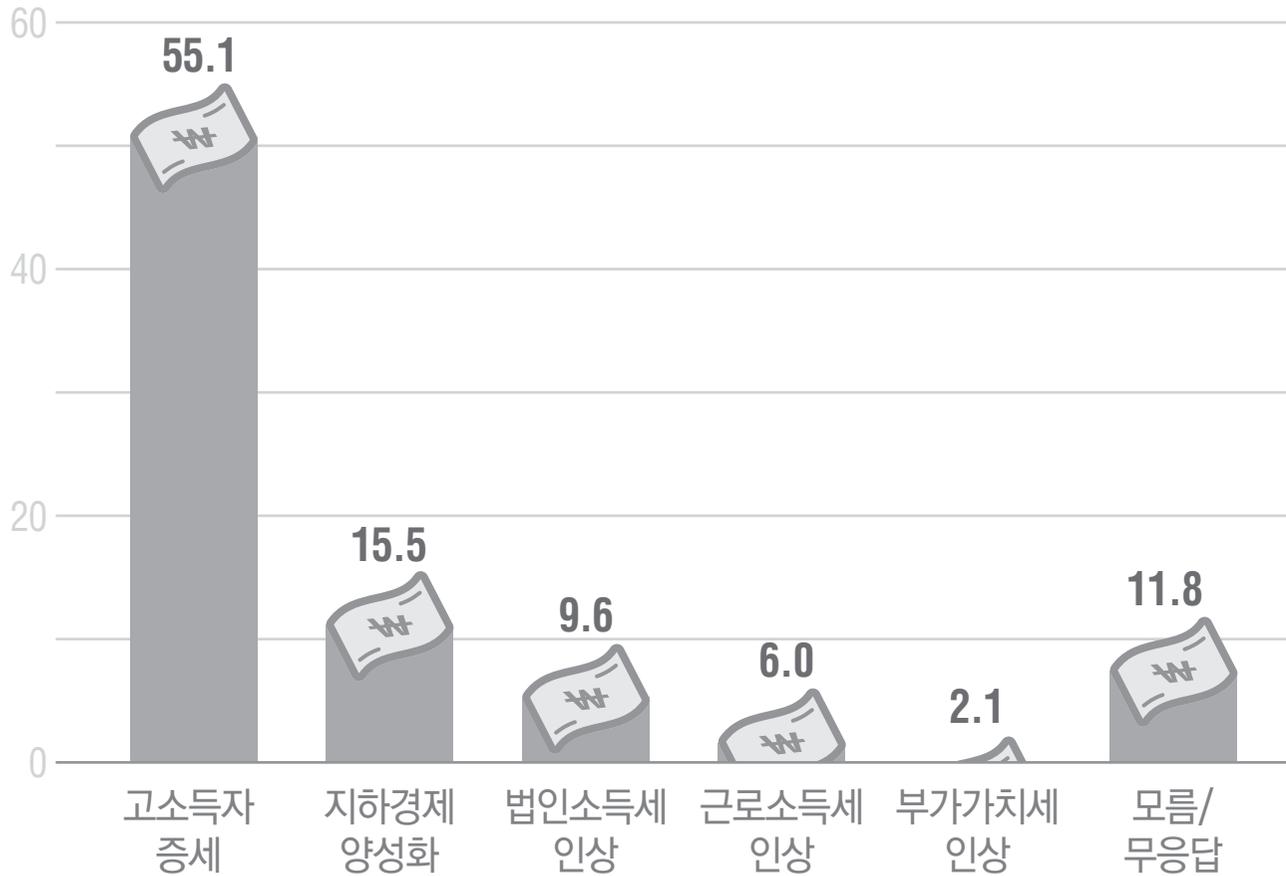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다. 과반을 약소하게 웃도는 51.6%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44.4%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근소한 차이지만 증세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았다.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하여는 남녀간 의견차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증세에 더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2.7%가 추가 세금 부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의향 없음 44.1%), 여성의 경우 36.2%만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했다(의향 없음 58.9%). 과거부터 여성은 경제 및 재정 정책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민감하고 보수적으로 반응해왔다. 이러한 기조가 증세 동의 여부에 대한 의향에서도 여전히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정당지지별로도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의향 있음(49.5%)과 의향 없음(46.5%)이 팽팽하게 맞섰다면, 민주당 지지층은 복지를 위한 증세를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의향 있음 39.9%, 의향 없음 57.3%). 복지를 위한 증세에 진보-야당 지지자가 반대하고, 보수-여당 지지자가 찬성하는 모순된 현상은 세제와 복지에 관한 개개인의 이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대선 레이스 이래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및 복지 이슈를 당의 의제로 가져가자 새누리당 지지층 역시 복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당론을 따라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기간 8월 12~14일, 단위 (%)

선생님께서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고소득자 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들었다. 응답자의 55.1%가 고소득자 증세를, 15.5%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손꼽았다. 그 외로는 법인세 인상 9.6%, 근로소득세 인상 6.0%, 부가가치세 인상 2.1%의 순이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의 반대 급부로 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